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031-14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8호 | 2013.3월

#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함의



# content

## 목 차

---

### 1.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료검토

- 1.1. 원조효과성
- 1.2. 효과적 개발협력
- 1.3. Post-2015 글로벌 목표
- 1.4.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과 OECD DAC 동료검토

### 2. 2012년 한국 OECD DAC 동료검토의 결과

- 2.1. 개도국 중심의 개발협력
- 2.2. 취약국에 대한 차별된 지원
- 2.3. 원조 외 자원과 개발협력

### 3. OECD DAC 동료검토의 한국 ODA에 대한 함의

## 참고문헌

## 1.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료검토

국제사회의 ‘원조와 성장’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개발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개발협력의 주체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후, DAC] 공여국들은 ‘동료검토’<sup>1)</sup>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Pagani, 2002). 이와 관련하여 본 정책과 이슈 8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근거한 2012년 한국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1. 원조효과성

2000년대 이전의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은 원조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IMF와 세계은행이 개도국 경제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한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원조와 개도국 경제구조 전환이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워싱턴 컨센서스’라 명명된 이러한 구조조정 모델은 개도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형화 된 정책모델로써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저하시키고 개도국의 경제구조 전환을 이루는 데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중되었다 (Chang, 2002; Lancaster, 2007). 동시에 개도국 경제성장과 관련 원조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져만 갔다 (Easterly, 2006; Moyo, 2009).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말부터 개도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에서는 공여국과 개도국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경제개발을 넘어선 인간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Hulme, 2007; Vandemoortele, 2011).

특히 공여국과 개도국 대표들은 OECD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경제성장이라는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 개발

1) 한국 정부는 'OECD DAC Peer Review'를 공식적으로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평가'라고 명시한다.

과정을 중시하면서 성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행동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2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인 '파리선언'에 반영되었고, 이후 제3차 OECD 고위급회담의 결과문서인 '아크라 행동강령'에 이르러서는 취약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별 상황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OECD, 2010b & 2011a).

## 1.2. 효과적 개발협력

2011년 마지막 OECD 고위급회의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부산총회]에서 국제 개발협력 주체들은 개도국의 주인인식과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다시 강조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개도국 현장에서의 원조분절화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여국의 개도국 시스템 활용, 개도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정치·사회적 성장 촉진을 강조하였다 (OECD, 2011b & 2011c).

또한 국제사회는 원조만으로는 개도국의 개발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조를 넘어선 '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부의 재편[shift of wealth]'이라 불리는 신흥국가들, 시민사회와 민간을 비롯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부상은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다양화로 이어졌고 국제개발협력 아키텍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남남협력을 통한 신흥국가들의 기여를 포용하면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을 개발협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원조 외 자원'인 민간부문과 개발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OECD, 2011c & 2011d).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 1.3. Post-2015 글로벌 목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2015년 MDGs 달성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후의 개발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G20의 녹색

성장 의제와 Rio+20의 지속가능 개발 논의가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UN, 2012). 이는 국제사회가 경제성장과 개발만을 강조하던 패러다임에서 탈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환경 및 성장저해 요인을 국제개발협력 담론에서 함께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4.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과 OECD DAC 동료검토

OECD DAC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료검토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DAC 동료검토는 개도국에서의 원조분절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공여국의 원조 채널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DAC 동료검토 가이드라인은 국제개발협력 규범인 MDGs, 파리선언 그리고 아크라 행동강령을 반영하였으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수립된 2012년 6월 이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새로운 이슈인 ‘촉매제로서의 원조’와 ‘복원력[*resilience*]'이 추가되었다 (OECD, 2010a & 2012b).

## 2. 2012년 한국 OECD DAC 동료검토의 결과

개도국 중심,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 원조 외 자원, 지속가능한 개발 등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비추어 2012년 실시된 우리의 DAC 동료검토를 ‘주관적’이고 ‘자화자찬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 ODA 정책 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DAC는 다음의 표와 같은 명시적 권고사항을 포함, 보고서 곳곳에 우리에게 제안코자 하는 사항을 외교적 용어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권고사항 및 보고서 상에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다양한 권고사항들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아래의 몇 가지 주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012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                      |                                                            |                                                                                                                                                                                                                                                                                                                                             |
|----------------------|------------------------------------------------------------|---------------------------------------------------------------------------------------------------------------------------------------------------------------------------------------------------------------------------------------------------------------------------------------------------------------------------------------------|
| I. 개발협력의 전반적인 프레임 워크 | <div>개발협력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수립</div> <div>정부의 홍보 투명성 책임성 강화</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의 목표, 우선순위 및 결과 명시</li> <li>-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측정가능한 성과평가 기준 반영, 수원국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 해당 협력국내에서 실시하는 한국의 모든 ODA 사업 포괄, 중장기 재원의 예측가능성 제고, 무·유상간 통합</li> <li>- 다자전략 수립</li> <li>- 범분야 이슈의 주류화</li> <li>- 국회, 시민사회, 연구기관, 수원국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정책, 전략, 절차 및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li> </ul> |
| II. 원조를 넘어서 개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정부적 아젠다 추진,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연구조사 강화 및 부처간 교류와 시민사회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li> </ul>                                                                                                                                                                                                   |
| III. 원조 규모와 배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0.25% 증액 목표 달성</li> <li>- 양·다자 및 무·유상 간의 균형 유지</li> <li>- 취약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무·유상 비율 고려 및 수원국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 뒤 유상차관 지원 결정</li> <li>- 원조 수단 결정 시 개발목표와 수원국의 주인의식, 선택, 운영 능력 등을 고려</li> </ul>                                                                                         |
| IV. 조직과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 계획 및 예산 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권한 강화</li> <li>- 무·유상 관계기관협의회 및 현지 ODA협의체 권한 강화</li> <li>- 관계부처와 기관의 인력 확대</li> <li>- 평가소위 등 평가시스템 강화</li> </ul>                                                                                                                                                       |
| V. 원조효과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원조 관리 시 원조효과성 원칙 반영</li> <li>- 비구속화 확대 및 연도별 로드맵(2015년 75%) 작성</li> <li>- 수원국 역량 강화 등</li> </ul>                                                                                                                                                                                      |
| VI. 인도적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정책 완성</li> <li>- 지원 주체, 대상, 수단의 근거 규정 마련</li> <li>- 양자 원조에 대한 세이프가드 수립 등</li> </ul>                                                                                                                                                                                             |

## 2.1. 개도국 중심의 개발협력

### 2.1.1. 개도국 맞춤형 기술협력 추진

OECD DAC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개도국의 주인의 식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역량개발, 개도국 현지에서의 원조분절화 감소, 그리고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후 CPS]에서의 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위해 개도국의 효과적 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OECD, 2011c). 따라서 DAC 동료검토에서도 공여국의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 동료검토 보고서에서는 한국 무상원조의 기술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역량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개발경험공유파트너십[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이후 DEEP]'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통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가 개도국 발전에 유용하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파리 선언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동 보고서도 한국의 기술협력은 개도국이 스스로 수립한 프로그램들과의 조율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OECD, 2012a: 82).

작년 12월 11일 OECD 본부에서 있었던 동료검토 최종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현재 한국의 기술협력 사업이 공여국 중심의 기술전수 형태의 사업은 아닌지' 확인하며 '일본도 과거 발전경험을 개발협력에 활용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의 지식공유 사업은 과거 경험 활용임에 비추어 대등한 경제수준 및 성장단계에 있는 개도국 간 지식공유가 더 균형 잡힌 것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영국 대표 역시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기술협력 사업에 대해 수원국이 원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동료검토를 통해 우리는 개발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협력 사업의 취지와 의도는 바람직하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개

도국의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2.1.2. 개도국에서의 분절화 축소

개도국 중심의 개발협력에는 개도국의 행정비용 경감을 위해 개도국 현장에서의 분절화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 주도의 개발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절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OECD, 2011b). 따라서 OECD DAC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개도국 현장에서의 원조분절화를 지양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DAC 동료검토의 12가지 교훈」중 한 가지는 ‘공여국 내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원조활동을 촉진하는 양자원조 구조를 합리화’ 하여 ‘원조 및 개발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일관성이 가능한 원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OECD는 개도국 내 원조분절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2008b).

이에 따라 한국의 DAC 동료검토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해 국내 분절화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OECD, 2012a: 17). 그러나 OECD DAC은 한국의 원조관리 시스템이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향후 원조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0개가 넘는 정부부처가 원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분절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OECD, 2012a: 47). 특히 개도국 현지에서의 분절화 현상을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의 여러 공공기관들이 현지 우리 공관이나 KOICA 사무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직접적으로 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OECD, 2012: 73 & 115).

실제로 DAC 검토팀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를 방문,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분절화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6월 실사 과정에서 DAC 검토팀이 우리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대상국에서의 분절화 현황 및 이의 해결 방안을 캐물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DAC 검토팀은 실사의 중간결과인 방한 및 현장방문 시 주로 느낀 점[Key Impressions]을 통해 ‘한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개발협력 예산과 제도의 분절화’ 라면서, 캄보디아에서 ODA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일부 공공기관의 분절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분절화 문제는 향후 CPS 개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방문 실사 이후 DAC 검토팀은 우리 정부가 해당 협력국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ODA 사업이 CPS 내에 포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관찰 결과는 동료검토 보고서 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개도국 별로 우리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DAC의 권고에 따라 우리 정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키기 힘든 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 2.2. 취약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OECD는 DAC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권고해 왔으며, 최근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최빈개도국 뿐만 아니라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DAC은 2012년 동료검토를 통해 차관이 올바른 환경에서 개발재원으로 제공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과 같이 채무부담[debt distress]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는 채무단계를 고려하여 차관 공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OECD, 2012a: 16).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받았던 2008년 특별검토[Special Review]에서도 최빈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유상원조 비율이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지적하면서, ‘DAC 원조조건에 관한 권고[DAC Recommendations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가 요구하듯이 한국 정부는 최빈개도국에서의 무상원조 포트폴리오를 증가시켜야 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ECD, 2008a: 7 & 18).

OECD DAC 동료검토는 국제사회의 고채무빈국[HIPCs]에 대한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고채무빈국에 대해서 신중한 차관제공을 통해 채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과 IMF는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Debt Sustainability Framework]를 통해 저소득국의 채무부담 정도를 3단계로 표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100% 무상지원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World Bank, 2012). 이에 따르면,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는 기본적으로 부채탕감 프로그램이지 해당국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즉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부채탕감을 받는 경우, 외채 부담은 경감되나, 향후 신중한 외채 차입과 운영 등 건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가 자동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World Bank, 2013).

특히, 세계은행과 IMF 기준에 따라 고채무빈국을 졸업한 국가들이 곧바로 채무상환능력을 회복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의 채무과잉[debt overhang]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방어적 차관형태[defensive lending]도 결국은 이들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여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Cohen et al., 2006: 4).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합의와 차관제공 관례에도 어긋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고채무빈국에 대한 차관제공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취약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이번 2012년 동료검토 권고사항은 2008년 특별검토 결과 및 'DAC 원조조건에 관한 권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그 논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에 우리 정부에 전달된 보고서 초안에서는 '취약국 및 고채무빈국에서 유상에 대한 무상 원조 비율을 증가시키고, 향후 부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phase out] 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 2012c: 5). 이에 대해 우리는 '유상원조 폐지'를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DAC 동료검토팀은 우리측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12월 11일 DAC 최종회의

에서 해당 부분이 또 다시 쟁점화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측은 회의 현장에서 해당 문안에 대한 수정을 재요청하였고, DAC 의장은 '취약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유상지원 자제'는 국제사회의 합의이나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우리 입장을 반영, '취약국 및 고채무빈국에서의 유상에 대한 무상비율을 신중히 검토하고, 유상원조 제공 시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과 재정 거버넌스를 신중히 고려한다 (OECD, 2012a: 15)'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DAC는 취약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유상차관 지원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 중에서도 더 취약한 고채무빈국과 취약국에 대한 유상차관 지원은 신정부의 정책기조인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과는 거리가 있는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료검토 보고서에서는 향후 우리 정부가 취약국 지원의 국제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KOICA가 '취약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점을 그 노력의 출발로서 높이 평가했다 (OECD, 2012a: 30).

### 2.3. 원조 외 자원과 개발협력

2008년 특별검토와 비교하여 2012년 동료검토에서 OECD DAC는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을 반영하여 ODA의 보완재로서 '원조 외 자원 [non-ODA financing]'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많은 DAC 회원국들이 최근 몇 년간 'ODA 이외의 공적자금[other official finance, 이후 OOF]'을 개도국에 제공해온 것과 관련하여 OECD는 2011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ODA 이외의 자원[non-ODA flow]'으로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OOF란 수출신용 등을 포함 비개발 활동에 제공된 자금 또는 공여국의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에 의해 비양허성 차관으로 제공되는 자금을 말한다 (OECD, 2012a: 57-58). 일부에서 이러한 개발금융[상업차관, 수출신용, 보증 등] 확대를 통해 ODA를 대체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협력 수단인 ODA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수단인 개발금융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서로 크게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민간부문을 양성하여 그들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후 PPP] 메커니즘도 검토되었다. OECD DAC은 한국 정부가 다른 DAC 회원국들로부터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특히 덴마크의 ‘기업 개발을 위한 지원 평가보고서[Synthesis of Evaluations on Support to Business Development]’와 세계은행의 ‘변화하는 세계 속의 민간부문 개발 : 평가의 교훈[Lessons from Evaluati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 2012a: 32).

### 3. OECD DAC 동료검토의 한국 ODA에 대한 함의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이후 최초로 실시된 동료검토로서 우리 개발협력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에 확정된 DAC의 권고가 다음 동료검토까지의 4년간 우리 개발협력 방향 설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DAC 회원국들이 동료 간 평가를 통해 실현가능한 교훈과 권고를 도출하는 상호학습의 장인 동료검토에 우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DAC 규범은 이러한 상호학습과 검증을 통해 도출된 기준으로서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나, ‘Like-Minded Group’인 DAC의 성격상 이러한 규범은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무시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은 아니다. DAC 규범은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우리는 2010년 DAC 가입 시 DAC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객관적·보편적 기준에 따라 우리 원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후진 콤플렉스’로 매도하는 것은 국제 ODA 환경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료검토는 우리의 정책과 사고를 ‘상대화·객관화’해 볼 수 있는 기회만큼 우리 ODA 정책과 집행을 되돌아보고 선진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번 동료검토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량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외교부와 KOICA는 무상원조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이번 OECD DAC의 권고사항을 주요 지침으로 삼아 이를 반영해 나갈 것이다. 특히, 향후 KOICA 조직과 사업의 개선 과정에서 이번 OECD DAC 동료검토의 주요결과를 반영, 실제 우리 ODA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특히, KOICA의 전략 및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서 동료검토의 주요 권고사항인 개도국 중심의 개발협력 지침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사업의 발굴 및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는 개도국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이 스스로 수립하고 있는 전략 및 프로그램에 최대한 조율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발효과적인’ ODA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KOICA에서는 소규모의 고립화된 프로젝트형 사업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에 기반한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 이후 PBA]’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는 PBA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이러한 접근방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KOICA의 DEEP 프로그램을 그 목적에 맞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DEEP 프로그램의 특징은 ‘맞춤형 컨설팅, 참여형 컨설팅, 성과중심형 컨설팅 및 포괄적 컨설팅’인 바, 이는 개도국의 상황과 필요를 강조하는 이번 동료검토의 주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동료검토에서 취약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강조한 만큼 정부 차원의 취약국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2011년에 수립한 KOICA 취약국가이드라인을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취약국 지원 이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노력,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수립 예정인 ‘취약국 지원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모니터링 지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Chang, H-J. (2002).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Anthem Press.
- Cohen, D., P. Jacquet, and H. Reisen (2006). After Gleneagles: What Role for Loans in ODA?. OECD Development Center Policy Brief No. 31. Paris, OECD.
- Easterly, W.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Press.
- Hulme, D. (2007). The Making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Development Meets Results-Based Management in an Imperfect World. BWPI Working Paper 16. Manchester, BWPI.
- Lancaster, A. (2007). Foreign Ai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yo, D.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nother Way for Africa. London, Penguin Books Ltd.
- OECD (2008a).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 \_\_\_\_\_ (2008b). Effective Aid Management: Twelve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 \_\_\_\_\_ (2010a).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 DCD/DAC(2010)33/FINAL.
- \_\_\_\_\_ (2010b).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Transforming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 \_\_\_\_\_ (2011a).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 \_\_\_\_\_ (2011b). Building Block on Managing Diversity and Reducing Fragmentation. Concept Note.
- \_\_\_\_\_ (2011c).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1d).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Development Building Block. Concept Note.

\_\_\_\_\_ (2012a). DAC Peer Review: Korea.

\_\_\_\_\_ (2012b). DAC Peer Review Reference Guide. DCD/DAC(2012)23/FINAL.

\_\_\_\_\_ (2012c). Review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nd Programs of Korea: DAC's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Note by the Secretariat), 20–Nov–2012. DCD/DAC/AR(2012)2/26/PART1.

Pagani, F. (2002). Peer Review as a Tool for Cooperation and Change. African Security Review 11 (4):15–24.

UN (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Vandemoortele, J. (2011). If No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n What? Third World Quarterly. 32(1): 9–25.

World Bank (2012). Economic Policy and Debt: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Low Income Countries (DSF). Last updated: 17 October 2012.

[Available at: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DEBTDEPT/0,,contentMDK:20261804~menuPK:64166739~pagePK:64166689~piPK:64166646~theSitePK:469043,00.html>

[Accessed: 29 January 2013]

\_\_\_\_\_ (2013). Why Hasn't the HIPC Initiative Guarantee Debt Sustainability?, Economic Policy and Debt: Frequently Asked Question.

[Available at: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DEBTDEPT/0,,contentMDK:20259564~pagePK:64166689~piPK:64166646~theSitePK:469043,00.html>

[Accessed: 29 January 2013]

연구자료

ODA연구 2013-02-048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